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20117 vol.72

삶의 질 시대로의 전환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방향과 전략

Contents

1. 왜, 삶의 질인가?
2. 삶의 질 정책의 개념과 방향
3.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구상(안)

연구진 장 세 길 부연구위원 zoru21@jthink.kr
황 영 모 부연구위원 hymlsm@jthink.k
이 중 섭 부연구위원 welfare73@jthink.kr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1월 17일 vol.72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원도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삶의 질 시대로의 전환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방향과 전략

1. 왜, 삶의 질인가?
1) 대안경제의 출현 ····· 3
2) 성장 패러다임의 보완 ····· 3
3) 문화 · 사회적 욕구의 확대 ····· 3

2. 삶의 질 정책의 개념과 방향
1) 삶의 질 구성요소와 영역 설정 ····· 5
2)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개념 ····· 6
3)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방향 ····· 8

3.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
1) 전라북도의 삶의 질 지표 및 최소기준 개발 ····· 11
2)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 11
3) 삶의 질 관련 조례제정 및 제도 개선 ····· 11
4)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12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구상(안) ····· 13

1. 왜, 삶의 질인가?

1) 대안경제의 출현

-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양적확대가 불가결하지만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달리 주민 간의 균형화된 삶의 질 향상, 주민복지 증진이 중요
- 경쟁사회의 모순이 확대되면서 생활양식이 변화 : 슬로라이프의 출현
  - IT업계의 속도 코드(Early Adopter)는 간편함과 대중화 코드(Slow Adopter)로 변화
- 슬로라이프에 기반한 Slow+Food+Tourism+City+Entertainment 성장
  - 대안경제로서 슬로시티는 주민참여→관광객 증가→지역 브랜드가치 상승→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1)]
- 전북의 농업 · 농촌은 침체를 벗어나 '농촌가치의 재발견' 과 '주민주도의 지역력(地域力) 강화' 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있음
  -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로컬푸드의 확대 등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질적 변화의 시그널이자 지역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능

2) 성장 패러다임의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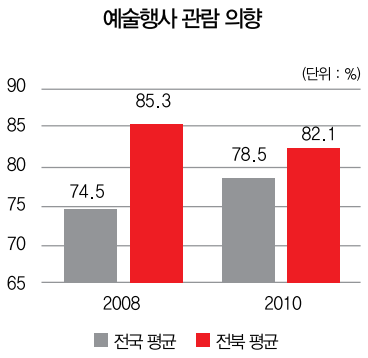
- 전북경제는 10년간 66.7% 성장(2000년 19.2조원→2009년 32조원)
  - 대형국책사업 추진,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으로 1인당 GRDP도 50.9% 성장(2003년 12.2백만원→2009년 18.5백만원)
- 여러 양적성장 정책의 성과로 지역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실업률, 빈곤률 등)는 낮음
  - 기업유치 성과가 곧바로 고용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사회적 여건은 대기업 중심의 사회구조를 넘어 소득 등 사회 불균형의 시정(재분배)과 건강, 환경, 복지 등을 중시하는 가치로 전환 중
  -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요소와 관련한 영역을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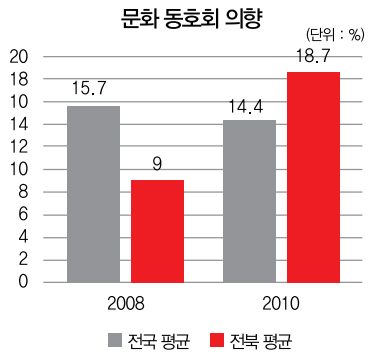
1) 완도군은 슬로시티 지정 이후 관광객이 20.1% 증가, 지역경제에 294억원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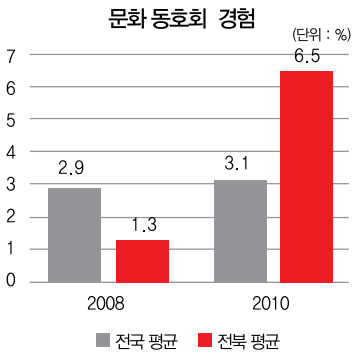
- GRDP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생활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기업유치가 이뤄져도 외부의 인구유입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경제 터전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삶의 질이 중요함을 시사
- 기존의 성장패러다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행복패러다임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필요

3) 문화 · 사회적 욕구의 확대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문화 · 사회적 욕구 역시 다양하게 표출
  - 예술행사 관람의향은 82.1%(전국 78.5%-2010년), 문화동호회 참여는 2년 사이 3배 가량 늘었고, 문화 동호회의 참여의향은 2배 가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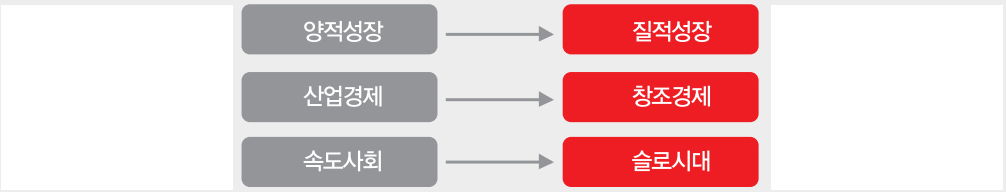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2008, 209.

- 도민 대부분(80.1%)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희망하지만, 생활체육 참여율은 30.0%로 희망과 실천의 간극 존재
  - 주 1회~3회 30분 이상 운동비율(30.0%)은 전국평균(32.0%)에 미달
-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 · 체육 · 여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여가경제(Leisure Economy) 시대가 새롭게 도래
  - 문화 · 오락서비스업 지출은 20년간 연평균 9.3% 증가, 5년간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비 비중도 2배 증가했고 활동형 여가[2]의 참여비율도 2.5배 증가
- 즉, 문화 · 체육 · 여가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의 선택적 욕구'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욕구'로 전환되고 있음
  -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권으로서 문화 · 체육 · 여가에 대한 정책마련이 절실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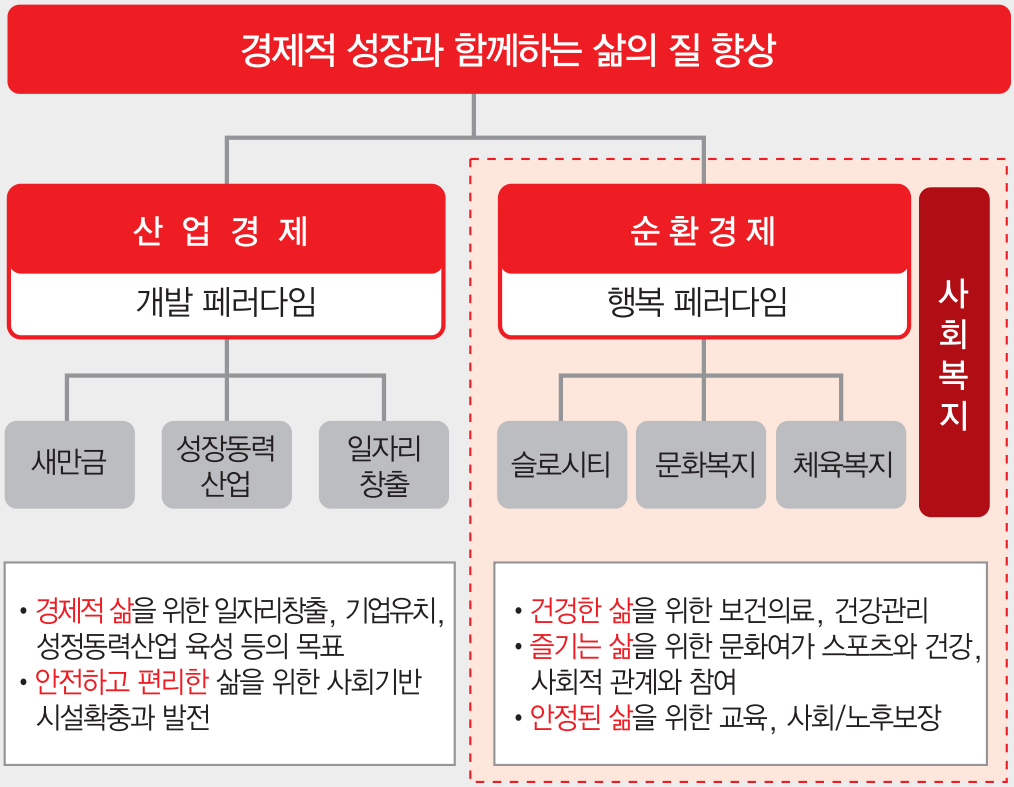
2) 소비행위를 수반하는 스포츠, 여행,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

·ĐŽ%D ƒlñ7 r(3%1> ‡äÄ •D Õs

- ; Ž%× r¨x¿b ª Õx¿b ‘¸ƒ•ª 9‘ƒ• Ø(Ž%ª ýŽ%s ý y º
- (¹D ×Y— ¤ û³D ñš8 $ç²× r¤‘ƒ•s ì r¤ ƒ•s 3 2&À ¨šç ã



- ÑÉÊyyÚ7 Ý“DrPÊ •ÞîPK ‘¸ƒ•s ìrï •ÞîPK ý ƒ•s D ¨ w 8 >ç •D Õ ñš8 Ññç 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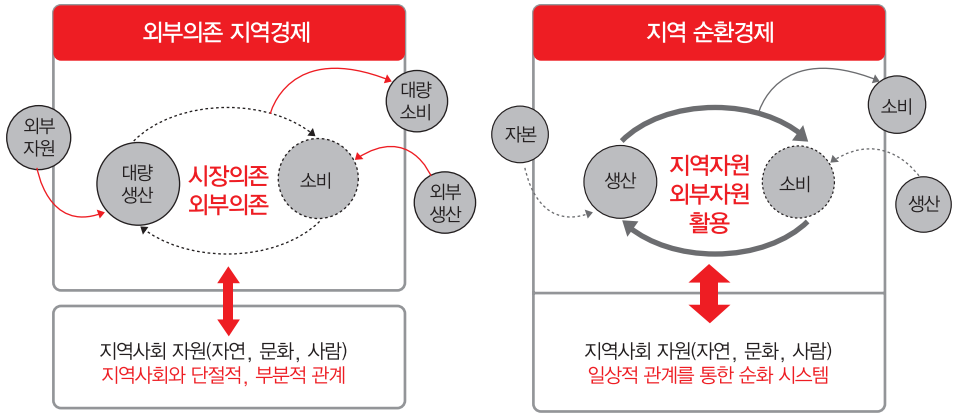


2)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개념

① 지역순환경제 지향

- 지역순환경제는 자원의 한계를 외부에 의존하는 외래형 개발이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개발논리에 대한 반성에 기반
  - 일정 지역의 특정한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 사회 전체의 발전을 지향

〈외부의존 지역경제와 지역순환경제의 구조 비교〉



주. 원의 크기는 양적인 규모를, 화살표의 실선은 주된 흐름, 점선은 부차적 흐름, 두께는 그 양을 의미
자료 : 구자인 외,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2011.

- 지역자원에 기초를 둔 지역산업 형성, 자치 · 환경 · 문화보전, 복합 산업화, 종합적 지역개발계획과 같은 효과적 진흥전략 수립을 강조
  - 지역자원 활용, 향토기업 육성, 지역주체 간 파트너십, 사회경제적 변환 · 혁신능력, 사회적 학습증진, 외부자본 규제 등이 핵심요건
-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의 자립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자기발전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의 문제
- 지역순환경제는 화폐로 계산되는 비용–편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벌이 경제'와 구별되는 '살림살이 경제'로서의 성격 가짐
  - 살림살이 경제는 실체적 경제를 시장영역(private), 국가영역(public), 사회적 영역(commons) 등의 층위로 나눌 때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를 중시

〈실체적 경제구조에서의 살림살이 경제의 파악〉

자료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2009.

② 행복권 추구

- 'GDP는 틀렸다[3]'
  - 한국의 GDP규모는 세계 14위, 교역규모는 세계 9위이지만 삶의 질은 OECD · G20 39개국 중 27위에 그침 (한국개발원, 2008년 조사)
-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4]'과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관계
  - 국민소득의 분기점($15,000~16,000) 이전까지 소득수준과 행복감이 같이 움직이다가 분기점을 넘어서면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관계 소멸
- 행복의 결정요인[5]은 사회 · 문화 · 물질적 웰빙
  - 미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6] : ①가족관계, ②재정상태, ③일(노동 아닌 보람있는 활동), ④공동체와 친구, ⑤건강, ⑥개인 자유, ⑦개인 가치
- 행복은 물질적 · 사회적 ·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되, 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비물질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행복학자들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시장에서 사기 어려운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
-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인간관계, 공동체), 문화적(개인의 가치) 만족과 행복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실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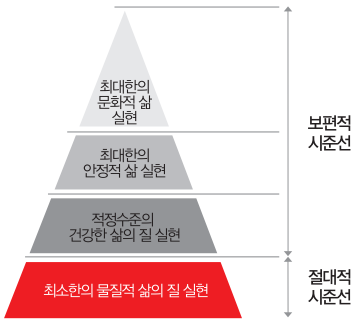
〈행복의 결정요인〉

③ 절대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

- 정책으로서 삶의 질 플랜은 정책대상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실현해야 함
- '절대성'은 모든 도민이 최소한의 물질적 삶을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
  -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최저 기준선 실현, 도민의 복지기본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삶의 질 플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3)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동녘, 2011.
4)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수준(소득수준/행복지수 결별점, decoupling point)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
5) 행복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하고, 결정요인을 '사회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목적, 긍정적 태도'로 설명
6) 미국 일반사회조사 결과(2005년).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의 원천은 ①건강, ②가족관계(한국갤럽, 2006)

- 절대적 기준선은 최소한의 도 정책의 기준선으로 정책의 수혜대상은 3분위 이하 혹은 중위소득 150%미만의 빈곤계층
  -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 빈곤가구의 소득점유율은 13% 내외인 반면, 소득 9분위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38%를 상회 : 소득계층 간 지역 내 재분배 정책 필요
- '보편성'은 모든 도민들이 경제여건과 취미에 따라 원하는 삶의 질의 수준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



  - 보편성은 재원의 분배를 특정집단에 집중 지원하지 않고, 소득의 다양한 층위별로 모든 계층의 욕구수준에 맞는 보편적 투자의 의미가 담겨야 함
- 재원의 분배나 수혜가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모든 층위가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아 재원의 분배 효과가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

3) 전라북도 삶의 질 플랜의 방향

① 슬로시티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 슬로시티는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이윤과 성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경제활동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
- 슬로시티는 지역 주민이 살기 좋으며,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외부 사람들이 매력을 갖는 찾기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
- '지역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자립형 경제활동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외부와의 역동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로 활력을 지역사회로 내재화하는 것
- 슬로시티의 구축은 '슬로푸드, 슬로산업, 슬로투어, 경관보전' 등의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지역 만들기 실천전략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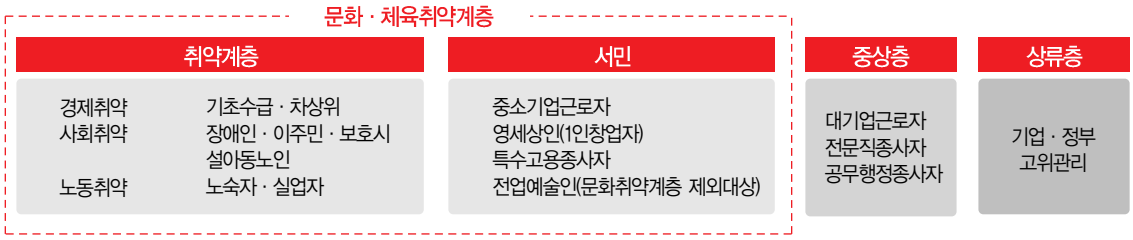
〈슬로시티의 구성요소별 주요내용〉

영 역	구성요소별 지향점
슬로푸드	전통식단, 식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슬로시티의 시작점
슬로산업	자기 의존적 경제를 구성하는 지역 토착적 경제구조
슬로투어	외부 소통 · 교류의 유력한 수단으로 소비되지 않은 관광
농촌경관	지역전통 · 고유문화 유지를 위한 환경과 어메니티 조성
슬로공동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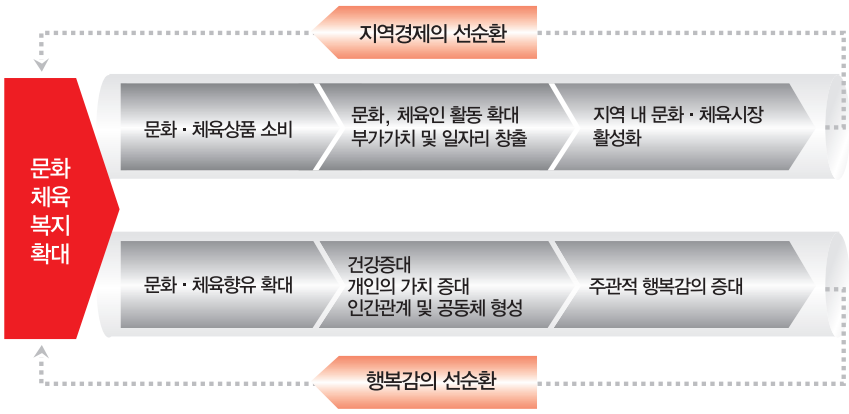
7) 문화권은 문화전체를 인권의 관점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으로 경제적 · 사회적 권리와 함께 인간 욕구충족에 필요한 권리(세계인권선언 25조), 건강권 역시 인권으로, 의식주에 앞서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상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리,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음(헌법 35, 36조)

② 행복을 더하는 문화 · 체육복지

- 인권으로서 문화권과 건강권[7]–문화 · 체육 향유기회 보장
  - '가진 사람의 선택적 수요' 였던 문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필수적 욕구' 로 전환되면서 최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경제 취약계층에서 문화 · 체육 취약계층으로 확대
  - 취약계층은 문화 · 체육부문의 절대적 기준선을 설정 · 지원, 그 이상은 보편적 기준선을 적용
  - ※ 문화 · 체육취약계층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 건강 · 경험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



- 문화 · 체육부문 지역 내 선순환구조 구축
  - 문화 바우처는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예술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가짐[8]
  - 문화 · 체육복지를 통한 문화 · 체육향유 기회보장은 지역 내 관련 경제활동을 늘려 궁극적으로 문화 · 체육부문의 지역 내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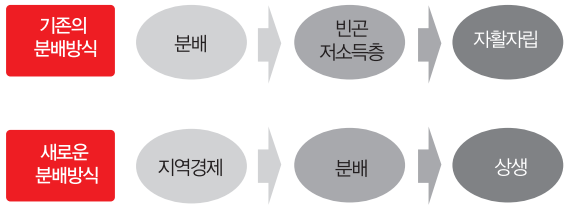
③ 복지재원의 생산성 강화, 선순환 복지체계 구축

- 특정집단 · 특정사람(빈곤층 중심)에 대한 현금 중심의 지원은 20세기 분배패러다임으로서 한계에 봉착
- 분배방식의 전환과 지역경제와의 상생구조 확립이 필요
  -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사회 내에서 한 개인의 자생능력을 훼손 → 분배에 투자되는 재정의 막대한 증가 초래 → 분배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분배중심의 복지국가의 위기 초래(1970년대)

8)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지원을 통해 최소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통한 신규 문화수요 창출, 선택과 경쟁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 궁극적으로 수요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

-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사람중심의 투자 → 지역에 대한 투자(21세기 분배패러다임) →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분배의 건강성과 지속성 유지

〈분배방식의 전환과 전북형 복지체제의 형태〉



○ 중산층 복지확대를 통한 예방적 복지의 실현
- 중산층의 투자 · 지원은 지역 내 건강한 가계경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지역소비를 유인하여 지역 내수기반 확장 : 확장된 내수가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유입될 수 있는 분배방식의 변환이 필요

○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재원 투자를 통해 지역 내 건강한 분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일정정도 소득을 가진 도민이 지역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소비하도록 지원해주고, 소비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소득은 다시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복지체계 확립

○ 소득계층별로 복지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복지재원의 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3.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

1) 전라북도의 삶의 질 지표 및 최소기준 개발

○ 행복 증대를 위해 전북도민이 누려야할 삶의 질의 지표 설정
- 물질 · 경제적, 정신 · 문화적, 환경 · 사회적 영역 전반의 제반 항목 제시

○ 삶의 질 지표별 도민 욕구조사를 통한 전라북도 삶의 질 최소기준 도출
- 슬로시티, 문화복지, 체육복지, 사회복지와 관련해 전북도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 전라북도 기초 단위(읍 · 면 · 동)별 유형화를 통한 욕구조사 실시
- 전주시민과 읍 · 면 주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읍 · 면 · 동별 관련 지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질 최소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삶의 질 관련 최소기준 설정 사례〉
- 최저생계비 계측은 소득 하위 40%(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주거비, 식료품비, 광역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 결정
- 국토해양부의 경우 주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발표하여 최저 주거비 계측 및 표준임대료 결정, 주거실태조사, 각종 주거복지 급여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 주거복지정책 설계 시 활용

2)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지금까지 지역발전전략은 산업경제 중심의 접근. 이로 인해 삶의 질 조건을 모색하는 여전히 물질 ·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고
  - 삶의 질에 대한 개념, 구성요소, 추진방향, 실천전략에 대한 이견 존재
-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 필요
- 첫째, 삶의 질 플랜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체계화 필요
  -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삶의 질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
- 둘째, 삶의 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북도민의 공감 필요
  - 전북도민 모두가 삶의 질 정책의 가치나 목표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강연, 토크 콘서트, 삶의 질 투어, 민관협력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셋째, 삶의 질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전북도민 운동 추진
  - '얼마나 많이 버는가' 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가' 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전북도민은 여전히 물질주의적 사고 존재. 삶의 질 시대의 일상화를 위한 도민운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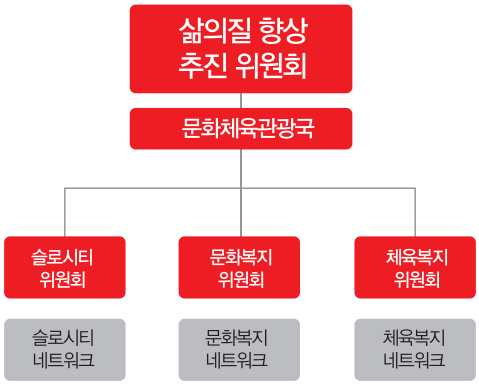
3) 삶의 질 관련 조례제정 및 제도 개선

- 새로운 삶의 질의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삶의 질과 관련한 권리의 범위와 수준을 규정하는 '(가칭)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삶의 질 시대로 전환한다는 것을 공표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
- 전라북도 조례 및 각종 제도 등을 검토, 삶의 질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개선하거나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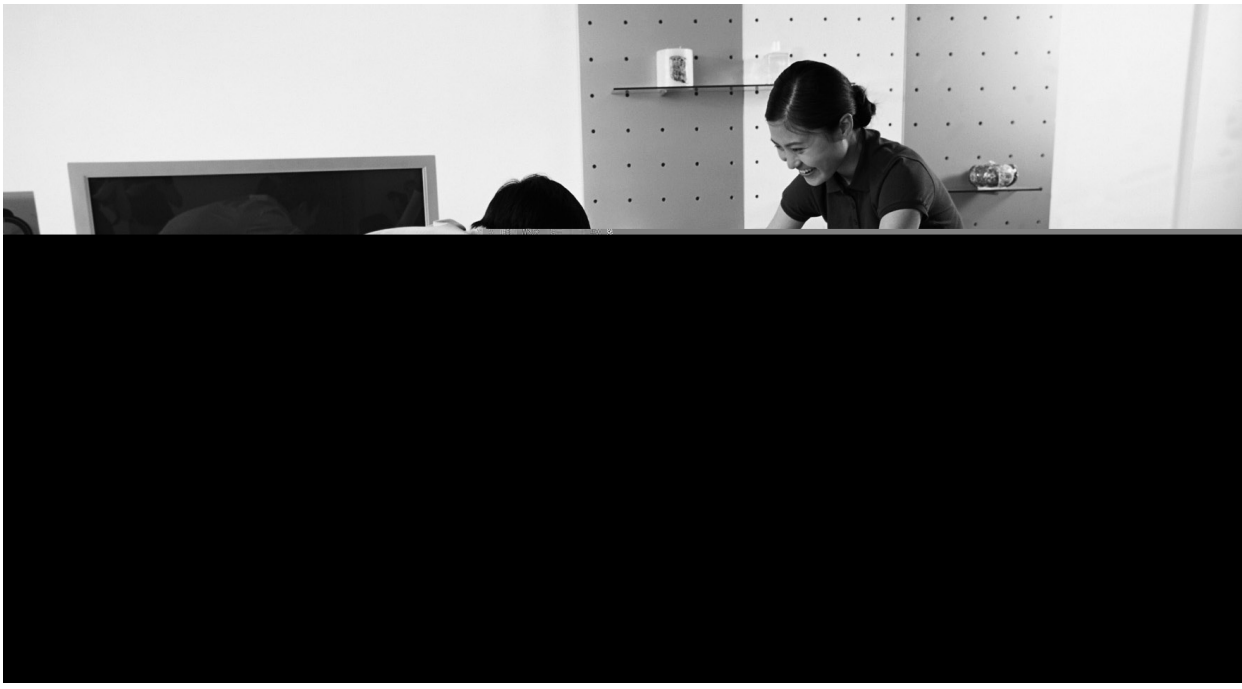
〈예술인 복지의 법적 규정, '예술인복지법' 사례〉

- '예술인복지법' 은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이 법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그 동안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예술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돌려주는 법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음

4) 삶의 질 플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삶의 질 플랜은 지금까지 지속돼왔던 개발패러다임 중심의 발전전략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고 필요
  - 전북도민의 삶의 문제로서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이들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삶의질향상추진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네트워크 구성
  -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전문가 중심 구성방식에서 탈피. '삶의 질 플랜의 수요자', '삶의 질 플랜 관련 사업 공급자', '전문가'로 구성
  - 삶의질향상추진위원회 : 삶의 질 향상 플랜 총괄
  - 분과별위원회 : 부문별 아젠다 설정, 정책프로그램 발굴, 민관협력사업 선정 등
  - 분과네트워크 : 부문별 단체 · 기관이 참여, 민관협력사업 추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 구상(안)

○ 슬로시티-지역순환경제 영역

1.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성장모델 구축

- 슬로시티 시범지역을 선정, 전라북도에 부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농촌 발전 전략화
- 학생들에게 양질의 도내 식재료 확대공급으로 심신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농가소득을 확대. 귀농귀촌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의 활력 도모

목표달성을 위한 2012년 사업(안) : 슬로시티 구축 시범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범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농촌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

2. 생산 · 가공 · 체험이 어우러진 농식품 6차산업 육성

- 농가에 수익이 환원되고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해 복합산업으로 연계 · 발전. 이를 통해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
-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한 생산 · 가공 · 유통 기반구축 및 지원

목표달성을 위한 2012년 사업(안) :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 · 가공 · 체험 · 판매가 연계된 6차 산업형 농촌 소득모델 육성, 향토사업 마을만들기 등

○ 문화 · 체육복지 영역

1. 문화향유지수 배가(倍加) 프로젝트

- 문화향유 수준을 보여주는 예술행사관람, 예술창작발표활동, 문화시설방문, 동호회참여 등의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상승시키는 사업 추진
- (예시)예술행사 관람률 67.2%(2010년)→80% 이상, 문화시설 방문률 52.2%(2010년)→80% 이상, 예술창작 · 발표 활동률 2.2%(2010년) →10% 이상, 문화동호회 참여율 6.5%(2010년)→10% 이상 등

목표달성을 위한 2012년 사업(안)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유휴공간 문화공간화, 작은도서관 확대 등),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확대, "명동과 똑같이 전북 읍내에서도 개봉 영화를 보다"(읍내 작은영화관 건립), 밀레에서 피카소까지 세계미술거장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확대(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지원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신나는 예술버스, 찾아가는 영화관) 등

2. 100만 도민예술가 육성 프로젝트

- 문화향유의 1단계는 예술행위(공연, 전시, 상영 등)에 대한 관람이며, 2단계는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예술행위에 대한 직접 참여(창작, 발표 등)
- 문화향유지수 배가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전북도민 모두를 예술인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활성화 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2012년 사업(안)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문화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군네트워크 구성, 문화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활동공간 및 교육강사 지원),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코디네이터 배치, 문화예술의 거리 및 시민예술촌 조성, 아동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강사파견 사업 등

3. 체육 참여지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프로젝트

- 전북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60% 이상으로 높이는 사업 추진
-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제공, 기존 생활체육시설 개방시간 확대 등 추진

목표달성을 위한 2012년 사업(안) :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 확대, 청소년 클럽 생활체육대회, 시군 생활체육 주말리그 지원,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소외종목의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이한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등

Issue Briefing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